

“해외주식 쏠림 심화, 단기매매 촉발 요인… 금투세 폐지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투업계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
“금투세, 제도의 영향 예측 불가능
투자자 건강보험료 인상될 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어 금투세 폐지와 재조정을 위해 정부 부처나 국회와도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국내주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5000만원,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를 통해 250만원 이상 이익을 거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금 부과선부터 3억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한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

과 만나 “2019년 금투세 도입 당시 이러한 부분이 검토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를 ‘부동산 세제 설계’가 ‘가격 상승 결과’를 가져온 것에 비유하며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좁다면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고, 오류가 있어도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투세는 해당하는 시장참여자들이 많아 제도가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중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지금 있는 규제를 안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해외 쪽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 것이고, 그렇다면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한 분도 있다”고 예측했다.

회의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일반 투자자들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세법에서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금융소득이 반영되는 까닭에서다.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일반 개미도 피해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특정 증권사 기준으로 내부 분석을 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몇천명, 몇만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십만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건보료 산정 범위에도 새로 포함된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 가운데 1%로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긴 할 거 같다”면서도 기존 예측보다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 참여자 숫자와 등가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비중이 늘었고, 그와중에 금리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아마도 (과세 대상자 규모를) 다시 (추산해) 볼 때”라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 효과를 분석해 상세한 파인튜닝(미세 조정)이나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셀트리온 등 4곳 ‘주채무계열’ 신규편입

금감원, 36개 계열기업군 공개

빛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 명단에 쿠방,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

용공여액(322조6000억원)보다 16조3000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000억원으로 전년 609조7000억원보다 31조9000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000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000억원(3.4%)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SK가 1위를, 현대차 2위를 차지하며 서로 자리를 바꿨고, 삼성(4위→3위)과 롯데(3위→4위)의 순위가 변동됐다.

주채무계열 명단에 신규 편입된 4개 계열 중 쿠방,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 조달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대백화점·넷마블·DN은 영업흑자 등에 따른 차입금 상환, 세이는 총차입금 선정 기준 미달,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계열 피인수 등으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韓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30명 ‘노인’

OECD, 노인부양비 29.4명 예측
10년 전 19.0명 대비 10.4명 증가
증가 폭 추정치 비교 OECD 3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올해 기준 30명에 육박한다는 추산이 한 국제기구 통계에서 제시됐다. 최근 10년간 20~64세 인구 대비 고령인구 수가 열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이 같은 노인부양비(比)의 증가 폭 추정치 비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권에 들었다.

2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올해 말 기준 29.4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 말(19.0명)과 비교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10.4명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비율은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으로 둔 비교이다.

38개 회원국(콜롬비아·코스타리카 수치 미취함) 중 2014~2024년 기간 노인부양비가 +10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 폴란드(+11.7명)와 슬로베니아(+10.7명)뿐이다.

이 통계는 전 세계 최고령국으로 꼽히는 일본은 10년간 +9.2명으로 추산했다. 또 영국의 경우 4.5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추정치는 또 미국 +8.2명을 비롯해 독일 +7.4명, 프랑스 +7.1명, 호주 +6.3명, 이탈리아 +5.8명, 멕시코 +3.9명 등이다. 한국 등 3개국을 제외한 회원국 모두가 한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노인부양비에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

크, 슬로바키아 등을 따라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는 내년에 한국의 20~64세 인구 100명당 노인 수가 30명을 넘어서고(31.7명), 2027년에 34.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년 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을 앞지르고 미국(2027년 34.7명) 추월마저 앞두는 시나리오이다. 20년 전인 지난 2004년 한국과 미국의 노인부양비는 각각 13.7명, 20.6명이었다.

2027년 이후 우리는 2050년까지 일본을 제외한 20여 개 회원국을 제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따라잡는다. 오는 2050년에 78.8명에 이른다는 게 OECD의 예측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투세 폐지 안되면 투자자 줄고 주식하락 불가피”

>> 1면 ‘비금융 자산 쏠림…’서 계속

◆ 금융자산, 퇴직연금 연금화부터

아울러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투자자는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금투세는 지난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증권업계 준비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줄며 주식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기업가치하락으로 다수 기업이 퇴출당하고 실물경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단 폐지한 뒤 상황에 따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자동연금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 구입 등으로 인해 중도 인출하는 일도 많고, 이직하는 경우도 잦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사용자 부담 ▲본인 부담 ▲투자 수익 세 가지 재원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적립금의 중도 누수를 줄여 충분한 재원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1% 수준이지만, 퇴직연금 자금이 누수되지 않고 제대로 연금 역할을 했을 때 현 가입자(43.4세)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10%로 수준으로 높아진다”며 “퇴직연금 가입부터 수급까지 적립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연금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누진종합소득세를 적용하고, 조기 인출 시에는 10%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강제 연금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2.1%, 40.5%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연금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IRP 담보대출 활성화 ▲일시금 수령 또는 조기인출 시 중과세 ▲수급 시 연금 수령 의무화 ▲연금수령 기준 조정 등이 제시됐다.

강 연구원은 “연금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수급 단계 뿐만 아니라 가입, 유지단계에서 충실한 적립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 1면
‘삼삼’서 계속

◆ 프로그램

- 13:30~14:00 참가 접수 및 등록(VIP 티타임)
- 14:00~14:05 VIP 축사
- 14:05~14:10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환영사

〈세션1〉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

- 14:10~14:50 시나 알바네즈, 코랄로 CEO
- 14:50~15:10 CJ제일제당 윤효정 경영리더
- 15:10~15:30 풀무원 정해정 상무
- 15:30~15:50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

〈세션2〉 토크쇼(주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푸드테크)

- 15:50~17:00 사회안병익(前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공동회장) 식신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윤효정 경영리더, 풀무원 정해정 상무,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 인테이크 R&D본부 총괄 김정훈 이사